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2-11호

발행일: 2023. 1. 3. (화)

제401회 국회(임시회, 2022. 12. 10. ~ 2023. 1. 8.)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은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 차

1. 개관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가.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 지원

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특집: 물적분할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의 출처는 링크된 원문입니다.

1. 개관

제401회 국회(임시회)는 제400회 국회(정기회)가 끝난 바로 다음날인 2022년 12월 10일부터 연이어 소집되었으며, 2023년 1월 8일까지 30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12월 23일 저녁부터 24일 새벽까지 개최된 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각 15건과 4건으로 모두 19건의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들이 가결되었습니다. 며칠 뒤 2022년 12월 28일 개최된 제4차 본회의에서도 20건의 법률안이 통과되며 2022년 마지막 본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제401회 국회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각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구간별로 현행대비 1퍼센트포인트씩 인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과세표준 산정 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4천억 원 미만’에서 ‘5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 연매출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하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연매출 80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300만 원까지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01회 국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사채발행한도를 각각 2배,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한국전력공사법」과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3)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재난 등 상황에서는 비대면으로 실업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5) 국가에 봉사한 이들을 형평성 있게 예우할 수 있도록 재해부상군경 등에 대해서도 양로시설·양육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한편, 제401회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논의된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노웅래)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71표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제401회 국회의 2022년 12월 23일 ~ 24일 본회의와 2022년 12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39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정무위원회(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의원 등 12인
4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의원 등 10인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의원 등 10인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의원 등 10인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의원 등 10인
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의원 등 10인
9	기획재정위원회(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 의원 등 14인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11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1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1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1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15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1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1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19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21	교육위원회(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5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부위원장	
26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의원 등 12인	
27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28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이태규 의원 등 14인	
29		행정안전위원회(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 의원 등 14인
3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31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32	문화체육관광 위원회(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 의원 등 10인	
33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3)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장	
3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장	
35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의원 등 10인	
3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37	환경노동위원회(3)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3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39	여성가족위원회(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이슈를 다룹니다. 이에 더해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정된 상장법인의 물적분할 시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된 금융·자본시장의 주요 법정책 이슈를 특집으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법정책 이슈

가.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 지원

개요

혁신성장은 초저성장으로 위축된 경제가 활기차게 바뀌고, 도약적 성장으로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기회가 찾아오며, 양극화를 극복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민간주도로 기술·자본·인력을 연결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경제정책입니다. 노동시장 개선, 규제 재설계, 사회적 자본 확충 등 경제와 사회 전반의 제도 혁신도 함께 이뤄지는 것을 추구합니다. 지난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투자·고용·리쇼어링 활성화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ESG 금융기반 마련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회는 2023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개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23일 본회의에서는 국제적인 조세경쟁 등을 고려하여 과표구간과 최고세율을 조정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원활한 기업승계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기획재정위원회	<p><u>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u></p> <p>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에 맞추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와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연결납세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결납세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외의 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하여 기업 과세를 개선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중간예납 의무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 개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2022-12-23 (수정가결)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2	기획재정위원회	<p><u>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u></p> <p>산학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대학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자산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며,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인상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2022-12-23 (수정가결)
3		<p><u>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u></p> <p>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 및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에 갈음하여 상속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하여 증여가 의제되는 이익에 대한 계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할증 평가되는 주식 등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2022-12-23 (수정가결)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재부·금융위)

과제목표

기업의 투자·고용 촉진 등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
정책금융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여 시장보완 분야 집중 지원

주요내용

- (투자·고용·리쇼어링 활성화)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 국제적 조세경쟁 등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촉진을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
 -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R&D 등 세제지원 강화
 -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입 지원을 위해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리쇼어링 지원 강화
 - 정책효과는 낮으면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
-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 세대 간 기술·노하우·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요건 등 합리화 등
-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정책금융이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민간금융 중복 최소화 및 시장보완 분야(미래투자 등) 집중 지원
- 정책금융 공급은 미래핵심기술, 탄소중립 등 대규모·장기·위험분야에 중점
 - 민간금융 영역의 정책금융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정책금융 성과 평가 및 정책금융의 발전적 재편 추진
- (ESG 금융기반 마련) 금융권의 ESG 분야 자금지원 확대 및 중소·벤처기업의 ESG 실사·진단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강화 추진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2022. 6. 16.)

①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해 법인세 등 정비

- **(법인세)** 국제적인 조세경쟁 등을 고려하여 과표구간(現 4단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現 25%)을 22%로 인하
- **(배당소득과세)**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를 개선
 -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상향*
 - * (현행) 일반·지주회사/상장·비상장법인 구분 및 지분율에 따라 30~100% (개선) 일반·지주회사/상장·비상장법인 구분 없이 단순화
 -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
 - * (현행)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을 국내 모기업의 소득(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하고,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에서 공제
- **(이월결손금)** 코로나 등에 따른 기업의 결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
 - * 일반법인 사업연도 소득의 60% → 80% <중소기업은 현재 최고 우대수준인 100% 유지>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제도 및 유인체계의 실효성,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 폐지
 - *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미환류된 소득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

②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승계 활성화

- **(가업승계 특례)**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합리화 추진
 -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여 가업상속공제와 선택 적용 허용
 - *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유예
 -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2배 이상 대폭 확대(0.4조원→1조원) 하고, 사후관리 기간 축소(7년→5년) 및 요건 완화
 -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하여 생전 가업승계를 장려

출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022. 6. 1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기재부, 2022. 7. 11.)

7. 세제개편 방향

□ '22년 세제개편 기본 방향

- 세제의 합리적 재편으로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세부담 적정화·정상화를 통해 민생 안정 및 국민 삶의 질 개선
- 조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 마련도 강화

□ 주요 내용

(1) **경제활력 제고** 기업 조세경쟁력 강화 및 기술·자본의 세대 간 이전 유도

- 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및 과표구간 단순화
- ② 국내의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완화를 통한 배당촉진·해외 유보소득 유입
- ③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등 규제성 조세 제도 합리화
- ④ 통합고용 세액공제 신설,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 등 일자리·투자 인센티브 확대
- ⑤ 가업승계 애로 대폭 완화를 통한 기술·자본의 세대 간 이전 촉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가업승계 시 납부유예 제도 신설 등)

(2) **민생 안정**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및 취약계층 지원, 부동산세제 정상화

- ①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2→2.4억원) 및 최대지급액 10% 인상
- ② 월세세액공제 상향 등 주거 안정 지원
- ③ 연금계좌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퇴직소득세 부담을 대폭 완화
- ④ 조세원칙에 맞게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3) **추진기반** 조세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 ② 전세계적 합의를 바탕으로 글로벌 최저한세(15%) 도입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참고 자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2. 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2. 11.

정부제출안: 벤처기업 등 직접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상향 및 일몰기한 연장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2. 11.

[2022년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 누리집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논의 및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2. 12. 8.

우리나라는 2010년 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한 이래로 적용범위를 100% “완전 지배” 자법인에 한정하여 오고 있어, 제도의 활용도 및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연결납세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분을 요건을 완화(100%→90%)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연결납세제도는 조세의 중립성 제고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향후 그 적용대상 확대에 관한 논의 시 해외 사례, 기업구조조정세제·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와의 정합성 확보 등의 측면과 소수 주주 보호문제 보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 개편 필요성 검토: 해외 주요국 정책동향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 Brief」 2022. 11. 22.

-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관련 현황, 해외 주요국 법인세 정책동향, 관련 선행연구 등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 검토
-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 수준은 OECD 평균을 상회
 - 이러한 패턴은 총 조세 수입 대비 법인세 비중과 GDP 대비 법인세 비중 두 가지 지표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관측
- 해외 주요국은 대부분 단순한 법인세율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세율 수준은 대체로 인하하는 추세가 확인
 - 최근 법인세율 체계를 단순화하고 세율을 인하한 해외 주요국 사례가 다수 관측
 - 우리나라는 4단계 이상 법인세율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2개의 OECD 회원국 중 하나
- 선행연구 검토 결과 누진적 법인세율 체계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다수이며, 법인세율 수준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상존하는 것으로 파악
 -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투자, 혁신성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 결과가 우세한 것으로 파악
 - 법인세율 인하의 경제성장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상존
- 이상의 논의 결과를 볼 때, 다음과 같은 정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국제적 표준, 누진구조에 대한 부정적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현행 4단계 누진구조는 단순화할 필요성 존재
 - 우리나라의 높은 법인세 부담 수준, 해외의 법인세율 인하 추이, 법인세율 인하가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선행연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인세율 인하 검토가 가능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논의의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2. 5. 13.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에 있어 종래 교부세 배분방식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환원하여 재산세와 도시 통합하는 방안은 그 실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지방재정 체계만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부동산 보유세 과세체계를 고려한다면 최근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나 과세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납세자의 담세력에 부합하는 적정 부담의 보유세 부과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1. 5. 28.

우리나라의 상속세 명목세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일본과 더불어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각종 공제제도나 소득세와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다른 나라와 단순비교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향후 상속세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객관적 비교·검증을 통하여 합리적인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개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청회 2022. 6. 22.

- 일 시: 2022년 6월 22일 (수) 13:30 ~ 17:00
- 장 소: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2층)
- 주 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 발표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문센터장, 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팀장
- 주 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개요

새 정부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시스템 확립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2021년 4월 20일 제정된 스토킹처벌법과 함께 이미 발생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 행위 발생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지원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입법정책브리핑 제2022-9호에서 다룬 사회적 약자 지원 및 보호 이슈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22년 12월 28일 본회의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신고에 대한 보복범죄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 지원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여성가족위원회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최근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가운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것에 맞추어,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스토킹 실태조사·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 등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2022-12-28 (원안가결)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법무부·여가부·금융위)

과제목표

권력형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흉악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근절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

홍포화되는 소년범죄, 주취범죄,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범죄, 불법 사금융 등 서민 대상 경제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

주요 내용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 입법 지원 및 양형기준 강화,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 최첨단 전자장치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중형선고와 결합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추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및 주취범죄 엄정 대응) 국제인권기준 등을 고려하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 소년범을 위한 통합가정법원 설치 지원, 해외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주취감경 폐지 검토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범죄 피해자 특별 구제책 마련) 범죄 유형에 따른 무고죄 법정형 구분 검토 및 무고 등 적발 강화, 위증죄 법정형 개선 검토, 디지털플랫폼 이용 신종 사기 적극 대응 및 피해자 구제 강화

(서민·소상공인 올리는 경제범죄 엄단) 부처간 협업으로 자본시장 교란사범 및 가상자산 관련 사범 엄단, 범죄수익 철거 환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에 대해 부처 합동으로 엄정 대응, 피해 방지, 피해자 지원 추진

[120대 국정과제]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법무부·방통위·여가부)

과제목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

주요 내용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여 연계 강화, 신변 보호부터 법률 지원·경제적지원·일상회복까지 종합적으로 '원스톱' 서비스 지원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 강화)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과 연동하여 부처별로 분산된 심리치유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프로그램 구축 등 지원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법무부·방통위·여가부 등 협업 강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등 행정 차원의 신변보호 강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도 마련) 현재 결정 및 해외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증거보전 법제화 추진,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수사 및 재판시스템 구축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산재된 법률구조 기구들을 총괄·관리하여 연계 강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의 대상 및 범위 재조정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성 강화,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여성가족부, 2022. 7. 25.)

2022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미래 인재로서의 청소년 성장 지원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 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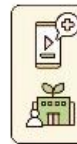


- ☑ 메타버스 국립청소년수련원 구축 등 디지털 기반 체험활동 확대
- ☑ 청소년 국제교류 확대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 시스템 구축
- ☑ 학업중단 청소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강화
- ☑ 청소년상담1388 강화 및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생활지원금 인상
- ☑ 가정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쉼터 확대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보호 강화



-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 ☑ 청소년 자살·자해 집중 심리클리닉 운영
- ☑ 정서행동문제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확대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5대 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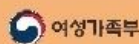


- ☑ 해바라기센터 연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국 확대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을 삭제지원 통합관리시스템 마련
- ☑ 남성, 장애인 등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 확대
- ☑ 스토킹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 ☑ 기관장 사건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3→1개월) 단축
- ☑ 공공기관 내 피해자 보호조치 등 의무화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참고 자료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22. 9.

정부제출안: 스톱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

정춘숙 의원안: 스톱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

[2022년 스톱킹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홍보 영상](#) 여성가족부 누리집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 누리집

[가족 관계 등에서의 스톱킹범죄 : 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톱킹범죄 위험과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2022. 10. 19.

신당역 살해사건으로 우리사회에서 스톱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졌다. 반의사불벌죄 폐지에서부터 가해자 GPS 감시에 이르기까지 범죄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톱킹범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고, 그에 따라 법률도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톱킹범죄가 참극을 초래할 우려가 큰 만큼 가정폭력범죄 정의에 스톱킹범죄를 포함하여 공백 없는 피해자 보호 방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직장 내 스톱킹 피해자 보호의 한계와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2022. 10. 12.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난 신당역 스톱킹 살인사건은 직장 내 스톱킹 피해자 보호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이에 스톱킹 현황과 직장 내 피해자 보호의 한계를 고찰하고 개선과제로 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준한 규제 도입, ② 직장 내 스톱킹 특수성 반영한 지침 마련, ③ 직장 내 스톱킹 피해자 적극적 보호조치, ④ 스톱킹 전문기구 설립을 제시하였다.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 2022. 10. 1.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 신변안전조치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먼저 신변안전조치에 관한 국내 현행법 체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관련 해외 입법례를 발굴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기존의 개선방향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신변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 8. 31.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스톱킹 피해자 보호·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스톱킹을 “여성폭력”에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내에서 스톱킹 피해자 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참고하면서,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법률 및 일반 범죄 피해자 지원 법률 등 현행법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고 입법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첫째, 스톱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정비 필요성을 도출함. 스톱킹 피해자 보호·지원에서 현행법의 한계를 살피고 법률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함. 둘째, 스톱킹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국회 발의 법안을 분석함. 20대 국회 및 21대 국회에 발의된 스톱킹 관련 법률 제정안 중에서, 처벌 외에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셋째,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법률을 분석함.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 등 스톱킹과 관련이 높은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스톱킹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입법적 개선방안이 있는지 살핌. 넷째, 스톱킹 피해자 보호·지원 법제화 내용을 마련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스톱킹 및 스톱킹 피해자의 정의, 스톱킹 피해자 지원 범위 및 지원 업무, 스톱킹 피해자 지원 시설 및 지원 방법, 기타 스톱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다섯째, 스톱킹 피해자 보호·지원 법제화 방안을 마련함. 단일 법률로 제정하는 안, 기존의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스톱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하여 적합한 법제화 방안을 제언함.

※ 특집: 물적분할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개요

회사분할은 분할의 대가로 사원권(주식)을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분할의 대가로서의 사원권(주식)을 분할회사가 취득하는 형태의 분할을 물적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기업이 고성장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하여 단기간 내 상장하면서 주주권 상실과 주가 하락 등 일반주주의 피해문제가 제기되었고, 특히 물적분할 과정에서 관련된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일반주주들의 권리보호 수단이 미흡하다는 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우리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는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부터 물적분할 시 일반주주의 권리보호 방안 마련을 약속했고, 2022년 9월 5일 금융위원회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을 발표해 ▲물적분할 시 관련 공시 강화 ▲분할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분할회사의 상장 시 상장심사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9월 28일부터 물적분할 자회사가 상장하려는 경우에는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을 심사하고 있고, 10월 18일부터는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이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의 목적, 기대효과, 주주보호 방안 및 상장계획 등 구조개편계획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2월 20일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되면서 위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이 제시한 일반주주 보호 장치가 모두 제도화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0일 국무회의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범위에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분할합병은 제외)의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제176조의7 제1항)을 의결하였습니다.

입법 동향

	관계 부처	법령 및 주요 내용	의결일자 (시행일자)
1	금융위원회	<p><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u></p> <p>주권상장법인이 핵심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회사 주주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물적 분할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청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p> <p>* 물적 분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 총수를 취득하여 지배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기업 분할(「상법」 제530조의12)</p> <p><법제처 제공></p>	2022-12-20 (2022-12-27)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위)

과제목표

우리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을 구축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

주요내용

(주식·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 개인투자자(초고액 주식보유자 제외)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

(공매도 제도 개선)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現. 140%)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공매도 운영 개선 추진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자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

(상장폐지 요건 정비) 기업 회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상장폐지 결정, 상장폐지를 단계적 추진하여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내부자 지분매도시 처분계획을 사전 공시토록 하고,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시 소액주주 보호 장치 마련

(투명성·공정성 개선) 외부감사인 역량 강화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 등 증권범죄 대응 강화

(외환시장 선진화)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 대외거래 규제 완화 등 외환시장 선진화 및 국부펀드 역할 확대 등을 통한 해외투자소득 제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022. 6. 16.)

2]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선진화 추진

- **(자본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를 통한 자본시장 재도약 기반 마련 및 모험자본 활성화로 실물경제의 지속적 성장 뒷받침
 - * 소액주주 권리보호 강화, 공정한 자본시장거래질서 확립, 낡은 규제 혁파 등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폐지¹⁾, 증권거래세 선제 인하(22년 0.23% → '23년 0.20%)²⁾
 - 1) (현행) 종목당 10억원 이상 또는 종목당 일정 지분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부과 (개선) 초고액 주식보유자(종목당 100억원 이상)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폐지
 - 2) 당초 금투세와 연계 인하계획이었으나 금투세 유예에도 불구하고, 선제 인하(코스피/코스닥)
- **(외환시장)** 해외소재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개장 시간 연장*, 공정한 경쟁여건·거시건전성 제도보완 추진('22.3/4 발표)
 - * 1단계로 런던시장 마감(한국시간 2시)까지 연장하고 향후 24시간까지 단계적 확대

출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022. 6. 1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금융위, 2022. 8. 8.)

[세부과제2] 자본시장 재도약

□ **기본방향**

- 우리 경제·기업이 실적에 합당한 평가를 받고, 향후 자본시장이 더욱 빠르고 강하게 반등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체질 개선

□ **추진과제**

① (신뢰제고) 투자자 권익 보호 강화 및 신뢰 제고

- 물적분할 子회사 상장시 공시·상장심사 강화, 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母회사 일반투자자 보호
- 대주주·임원의 주식 매도시 처분계획 '사전' 공시의무 부과
-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근절을 위해 과징금, 증권거래 제한 도입
- 상장폐지시 기업 회생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 상폐를 결정하도록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폐지 제도 정비
- 불법공매도 및 그 연계행위 적발·처벌 강화, 장기(90일 이상) 공매도 (대차) 보고의무 부과 및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등 제도 개선

② (글로벌 정합성 제고) 자본시장 제도와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개편

- 투자 관련 절차·공시 등의 국제 정합성 제고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
- 자본시장 경쟁 촉진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대체거래소 설립 허용

◆ 주요 과제를 조속히 발표·추진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 및 투자자금 유입확대 기반 마련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참고 자료

[상장기업 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물적분할 후 기업공개 시 주주 권리 침해에 관한 법경제학적 고찰](#)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연구」 2022. 10. 31.

본 연구는 물적분할 후 기업공개 과정을 모형화하여 그 과정에서의 주주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보편적인 판단 준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분할상장이 진행되고, 주주 권리 침해가 발생할 각각의 필요충분조건을, ‘성장 가능성’과 ‘투자효율성’ 두 가지 지표로 특정한다. 더 나아가 제시된 모형을 토대로, 주주 권리 보호 방안으로 거론되는 물적분할 대신 인적분할만 허용하는 방안, 기존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정하는 방안 모두 한계가 있음을 보인다. 개별 사안에 대한 보편적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제적, 일괄적 장치보다는, 일반 주주들의 사전적 보호를 담보하기 위한 소액주주가치보호의 명문화 등의 검토를 제안한다.

[물적분할 및 자회사 상장에 따른 소액주주 보호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22. 6. 2.

□ 회사의 물적분할과 자회사 상장은 현행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적법한 행위임. 다만, 소액주주들이 주가 하락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소액주주의 보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물적분할이 분할 후에 신설된 자회사를 상장하는 절차로 이어지면서 대주주에게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① 소액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② 소액주주 권리이전, ③ 이해상충(모회사 소액주주 vs 자회사 소액주주, 기존 회사의 대주주 vs 소액주주)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음

□ 소액주주 보호 방안으로 ①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의무 신설 방안, ②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방안, ③ 신주인수권 부여 방안, ④ 소수주주의 다수의결권(Majority of Minority) 제도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각각의 방안이 장단점이 혼재하고 있음

□ 법령을 개정하여 회사법 이론과 판례를 변경하는 것은 법원과 학계, 재계, 소액주주 등 각 측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법무부와 금융당국을 포함한 관계기관에서 물적분할 및 자회사 상장에 따른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법률적·정책적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물적분할과 모자기업 동시상장의 주요 이슈](#)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022. 6. 2.

최근 상장기업의 물적분할과 쪼개기상장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되었으나 대부분의 논의가 일부 대기업 사례에만 국한되어 있다. 2010~2021년까지 12년 동안 물적분할 공시 377개와 모자기업 동시상장 157개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 동인 외에도 투자유치, 매각, 구조조정 등 다양한 목적의 물적분할이 증가하며 물적분할의 양태가 복잡해지고 있다. 물적분할 공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부정적 뉴스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자기자본의 시장가치·장부가치 비율로 측정된 물적분할 기업의 기업가치는 중장기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고 있으며 업종 평균 기업가치와 비교해도 향상됨으로써 물적분할이 일반적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물적분할의 쪼개기상장은 2010~2021년 기간 17개에 그쳐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물적분할 쪼개기상장을 포함하는 모자기업 동시상장은 매년 신규상장기업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시상장 자회사는 신규상장기업 중 기업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미 상장되어 있는 모회사는 자회사 상장 이후 기업가치가 유의하게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업가치 측면에서 물적분할 쪼개기상장을 비롯한 모자기업 동시상장은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 물적분할과 쪼개기상장을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모자기업 동시상장에 대해 상장규정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와 해외사례를 참조할 때 물적분할에 대해서는 최근 개정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소액주주 보호 방안을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상장기업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쪼개기상장 등 모자기업 동시상장에 대해서는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조치 또는 상장심사 강화를 통한 억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대선주자들의 자본시장 공약 점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논단」 2022. 3. 7.

자본시장은 규제가 강한 시장으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이론적, 실제적 근거가 존재한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유력 대선후보들의 자본시장 공약은 과도한 규제완화에 치우친 감이 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소득 비과세, 주식양도세 폐지 같은 경우는 선거의 치열한 중원확보 경쟁으로 인해 정책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선거 이후에도 냉정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물적분할이나 공매도의 경우 공약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제대로 잡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물적분할의 경우 한국 주식시장의 가장 시의성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대선후보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진 김에 대선 직후부터 즉시 법제도화에 나서기를 바란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방안 정책세미나」 금융위원회 등 정책세미나 2022. 7. 14.

- 일시/장소 : '22.7.14.(목) 16:00~18:00 / 금융투자협회 3층 볼스홀
- 논의주제 및 세부일정

구분	시간	내용
주제 발표	16:10~16:40	○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방안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패널 토론	16:40~18:00	○ (사 회) 박영석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토론자) -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 - 송영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 -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 - 이현균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지평법정책연구소 ·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대표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팀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